

도, 호우 피해 주민에 지방세 감면

'호우 피해 주민에 대한 도세 감면 동의안' 도의회 의결... 도내 전 지역 대상 2024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등

전북자치도가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에 대한 도세 감면 지원을 실시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호우 피해 주민에 대한 도세 감면 동의안'이 의결됨에 따라 호우 피해로 인해 건축물과 주택이 침수, 반파, 전파되는 피해를 입은 주민을 대상으로 2024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15일 완주군이

특별재난지역에 우선 선포된 직후 도의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제412회 임시회에 도세 감면 동의안을 긴급으로 제출하는 등 선제적으로 지방세 감면을 지원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집중호우로 피해가 심각한 점을 고려하여 감면 적용 범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된 완주군에 한정하지 않고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 적용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국가재난관리시스템

(N.D.M.S)에 피해 사실이 확정된 과세 물건에 대해 직권으로 감면할 예정이며,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할 계획이다.

또한, 집중호우로 인해 건축물이 멸실·파손된 것으로 확인되면 건축허가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건축허가나 대체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할 방침이다.

침수된 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침수일로부터 자동차세를 면제받을 수 있고, 대체취득하는 경우 취

득세가 면제된다.

아울러, 이미 고지된 주택 및 건축물 재산세 등은 징수를 최대 1년 유예하거나 취득세 등 납부기한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은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김종필 전북특별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지방세세 지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호우 피해 도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방세세 지원이 누락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재해예방시설 점검... 도민 안전 '최우선'

순창 순화지구 우수저류시설 · 무더위 쉼터 시설 점검 등



윤동욱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이 25일 순창 순화지구 우수저류시설 사업 현장과 인근 무더위 쉼터를 차례로 점검하고, 순창군 관계 공무원들을 격려했다.

집중호우와 폭염이 잇따른 가운데 윤동욱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이 25일 순창 순화지구 우수저류시설 사업 현장과 인근 무더위 쉼터를 차례로 점검하고, 순창군 관계 공무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집중호우 시 우수 저류시설 빗물펌프장의 가동 매뉴얼 숙지 여부, 상황 발생 시 시설물 작동 여부를 살피는 등 집중호우에 대비한 총체적인 시설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특히, 오는 8월 말 준공 예정인 순화지구 우수 저류시설은 사업비 98억원

을 투입해 저류시설 1만300㎡, 배수펌프 1식, 관로 개신 425m 등을 설치하여 지방하천인 경천과 순창군청 인근의 수위 차로 인한 저지대의 내수 침수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최근 폭염주의보가 발표되는 등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어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옥천 및 창신 마을회관 무더위 쉼터 관리를 방문하여 지역 주민들과 소통했다.

윤동욱 도민안전실장은 "앞으로 태풍과 집중호우에 피해가 없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하며, "폭염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종합적인 대책을 통해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기후위기 시대 '농업인의 건강권 확보' 위한 방안 제안

전북연구원, 장시간 실외 작업 농업인에 대한 관심 · 선제적 대응 · 건강정책 수립 강조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이슈브리핑(304호) '기후위기 시대의 시각지대, 농업인 건강!'을 통해 실외에서 장시간 작업하는 농업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농업인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장마, 폭우, 태풍 등이 농업생산 전반에 피해를 주고 있으나, 탄소 중립 시대를 맞아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으로 농업을 주목하며, 농업인을 기후 위기의 피해자 또는 책임자로 보고 있다.

장시간 실외에서 작업하는 농업인은 열사병부터 정신건강 문제에 걸쳐 기후 위기로 건강권을 침해받고 있으나, 농업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관심이 부재하다.

폭풍, 가뭄, 홍수, 폭염, 공기오염 등 기후변화가 개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으로 확인되면서, 미국,

영국 등 해외 국가들은 기후 위기 시대에 개인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한 법률 제정 및 정책 수립을 하고 있다. 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또한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인식하고, 기후 위기 취약계층의 안전 확인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기후 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2023년 6월에 제정하며, 탄소 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기후 취약계층·부문·지역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들 정책은 나이, 사회경제적 수준, 건강 상태 등에서 기후에 민감한 계층에 중점을 두고 있어 열악한 보건의료 인프라를 갖춘 농촌에서 장시간 실외 농업 활동을 수행해야 하는 농업인은 기후 위기 취약계층으로 크게 주목받

지 못하고 있다.

특히, 초고령사회인 농촌의 농업인이 고령화되면서 기후변화가 농업인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도시, 타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구 책임을 맡은 조원지 책임 연구원은 기후 위기 시대에 농업인의 건강권 확보가 자신의 현재와 미래의 삶과 건강의 질을 좌우하기 때문에 농업인의 기후 위기에 대한 적응력 제고를 위한 방안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령인구 비율이 45% 이상인 전북특별자치도 농촌에서 농업인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사회적, 산업보건의적 관심과 함께 선제적 대응이 마련되어야 한다.

조원지 책임 연구원은 농업인이 기후 위기와 기후변화가 농업뿐만 아니라 자신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인

식하고 기후 적응을 위한 실천을 할 수 있도록 기후 건강 리더십을 증진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농업인을 위한 기후와 건강 교육 및 홍보, 전문 강사 양성이 필요하다. 또한, 농업인의 교육과 훈련은 농업인이 농업기술센터, 농협 등 실생활에서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원지 책임연구원은 언급했다.

2022년부터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모니터링하는 기후 보건 영향평가의 조사 대상인 일반 국민을 연령, 산업, 지역(시군, 읍면) 등으로 세분화하여 조사·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도 농업·농촌 분야의 지자체 담당자와 관련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통해 기후변화의 영향이 건강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고 연구책임자는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가축방역평가서 '1위'

구제역 · ASF 청정화 유지, 고병원성 AI 최단기간 종식 등 적극적 · 창의적인 방역정책으로 전국 '최우수' 수상

전북특별자치도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시행된 2024년 지자체 가축방역 우수사례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다.

이번 가축방역 우수사례 평가는 전국 1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객관성 투명성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외부평가단에서 실시했다.

평가 항목은 지난 1년간 방역 우수사례 및 주요 가축 질병에 대한 추진 실적 평가 등 26개 항목이다.

도는 지난 한 해 동안 고병원성 AI, 렘피스킨병이 발생하기도 했으나, 선제적인 예방, 과감한 현장 방역, 제도개선 및 적극 지원을 목표로 방역 활동을 추진한 것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우선 선제적 예방책으로 사슴 구제역 일제 집중(전국 유일), 축산 농가 방역 순회교육(10회), 가상방역 훈련(2회), 방역 취약 농가 엄

격한 사후관리 등을 시행했다.

또한, 과감한 현장 방역을 통해 수의사 동원력을 통한 렘피스킨 조기 집중, 열화상 드론 활용 뗏목소독, 오리 농가 사육제한, 거점 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확대 운영, 관련 부서(재난, 보건부서 등) 적극적인 협업 등을 시행했다.

그리고, 제도개선 및 적극지원을 통해 동물 사체 처리가 적법화 추진, 현장 맞춤형 신규사업 발굴(5개 사업, 5억1,000만원), 방역 참여 여부를 반영한 농가별 차등 지원, 이동식 열처리 활용으로 살처분 매물지 비발생 등을 시행했다.

도는 이와 같은 방역 활동의 성과로 7년 연속 구제역 비발생, 함께 형성을 전국 최고 달성(96.0%), 아프리카돼지열병 비발생, 역대 최단기간 고병원성 AI 발생 종료(13일)라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룬 바 있다. /이만호 기자

'제2회 워라벨 경진대회' 참가기업 모집

내달 23일까지 신청

전북여성가족재단(전정희 원장)은 '제2회 워라벨 경진대회' 참가기업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도내 일·생활균형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발굴, 선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획했다. 이번 워라벨 경진대회는 전북지역 기업들이 참여하며, 기업 규모 제한은 없다.

공모내용은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하여 직장 내 일·생활균형 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인 사례 △가족친화제도 구축 및 실행,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가족친화경영을 적극적으로 도입·운

영 중인 사례 △법정 기준을 상회하는 제도나 타기업(관)과 차별화된 제도를 선도적으로 운영하는 대표 경영마인드, 대표·직원 간 워라벨 문화 정착 노력 등 기업들이 실천하고 있는 일·생활균형 사례를 자유롭게 작성하면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관)은 전북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www.jwfor.or.kr)를 통해 8월 23일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이후 8월 중 서류심사를 거쳐 선정기업(관)을 발표하며, 시상식은 추후 11월 중 진행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www.jwfor.or.kr) 또는 취업지원부(063-253-3850)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북자치도, 사슴 구제역 일제 집중

전북특별자치도는 구제역 청정화 유지를 위해 도내에서 사육 중인 모든 사슴에 대해 구제역 일제 집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대상은 꽃사슴, 레드디어, 엘크 등 93농가 1,452마리이다.

도는 8월까지 사슴 전문수의사 6개반을 투입하여 모든 사슴에 대한 일제 집중을 끝낼 계획이며, 연간 집중시술비는 4,300만원이다. /이만호 기자

수사슴은 5월~6월 녹용 채취를 위한 제각을 하고, 암사슴은 6월~7월에 분만을 해, 사육관리에 안정적인 8월에 일제 집중을 추진한다.

또한, 사슴은 소, 돼지 등과 같이 구제역에 감염될 수 있으나 야생동물 사체가 남아있어 접근하기 까다롭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전문 수의사의 예방접종 지원이 필요하다. /이만호 기자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 전면 시행을"

전북자치도의회 탄소중립특위, 2차 업무보고회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수 의원, 익산)는 25일,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이후의 사업별 추진 현황에 대해 환경산업팀 등 5개 국과 전북 탄소중립지원센터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업무보고 주요 내용은 △그린카(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녹색 대중교통 활성화와 추진 △재생에너지 보급 및 산업기반 구축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전북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주요 사업별 세부 추진 현황과 이행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영영선 위원(더불어민주당, 정읍)은 "탄소중립을 위한 추진되는 사업들의 경우, 사업의 전반적인 효과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 비용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전북자치도에서는 온실가스감축 인지예산제를 전 실국에서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가 탄소중립을 선도하여 대표적인 탄소중립 지역으로 거듭나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과 추진을 위해서는 탄소중립추진단이 설치·운영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만호 기자

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지역 주민과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오안 위원(더불어민주당, 완주)은 녹색 대중교통 활성화 추진 사업에 대해 질의하며, 행복콜서비스, k-패스, 공유 모빌리티 보급 등을 추진하는 것도 좋지만,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중교통 분담률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하며, 이를 위해서는 도내 교통 오지까지도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광역교통망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한정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익산)은 탄소중립을 위한 추진되는 사업들의 경우, 사업의 전반적인 효과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 비용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전북자치도에서는 온실가스감축 인지예산제를 전 실국에서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북특별자치도가 탄소중립을 선도하여 대표적인 탄소중립 지역으로 거듭나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과 추진을 위해서는 탄소중립추진단이 설치·운영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만호 기자

→ 1면에 이어... 김관영 도지사, 정부에 지역맞춤형 저출생 대응방안 논의

특히 지방재정 투자심사제도 안전은 김 지사가 실무협의회 자리에서 지자체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투자심사 대상 기준을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 건의해 이번 협의회에서 상정 의결됐다.

종합토론에서 김관영 도지사는 "국가 저출생을 비상사태로 선언하고, 법국가적 역할을 총동원해 지원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며, "지역에서도 중앙정부와 협력해 저출생 대응에 노력과 힘을 보탬 것"이라고 적극적인 동참 의지를 밝혔다.

다만, 김관영 지사는 국가와 지방의 역할 구분을 강조하며, "현금성 지원 정책은 국가차원에서 장기적이고 일관성있게 시행하고, 지자체는 지역 맞춤형 서비스나 인프라를 구축해 특색 있는 자체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 공공산후조리원, 국공립어린이집 등 필수 인프라 구축과 지역 특성에 맞는 밀착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저출생에 대응할 수



25일 충남도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 (사진=전북특별자치도청 제공)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 규모를 현재 1조원에서 2조원 내지 3조원으로 확대하고, 전북자치도가 테스트베드로서 혁신적인 다자녀가구 지원방안이 도입될 수 있도록 전북특별법 특례 반영을 적극 건의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앞서 개최된 17개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김 지사는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협의회 결과를 공유하고 지역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저출생 대응과 외국인 정책이 도입될 수 있도록 지역에서 한목소리로 정부에 건의하자고 제안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의회, 후반기

간행물편집위원회 위촉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는 25일 의정실에서 제12대 도의회 후반기 간행물편집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간행물편집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5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으로는 문화안전소방위원회 김정기 의원(부안)이 선출됐다.

위원으로는 기획행정위원회 영영선 의원(정읍 2), 농업복지환경위원회 김정수 의원(익산 2), 경제산업건설위원회 나인권 의원(김제 1), 교육위원회 전용태 의원(진안)이 위촉됐다.

위원회는 도의회에서 발간하는 소식지 '전북자치도의회'를 비롯한 간행물의 편집과 간행의 종합적인 방침과 계획을 수립하고, 자료의 확보와 원고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임기는 오는 2026년 6월 30일까지 2년간이다.

김정기 위원장은 "도의회 소식지는 의원들의 다양한 의정활동 내용을 도민들에게 알리고 소통하기 위한 간행물"이라며, "도의회 역할과 기능을 널리 알리고, 지역의 불거림과 임을 거리 등 다양한 내용을 담아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